



홍철 지역발전위원장이 전하는 지역발전의 철학

“수도권 따라하기 그만, 내부동력 만들라”

홍철(66)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은 19일 “지역이 수도권 따라하기에 벗어나 지역만의 특성을 최대한 살려 내부 동력을 만들고 중앙정부가 이를 돕는 시스템을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위원장은 이날 광주일보와 단독 인터뷰에서 경제적인 균형보다는 지역의 여건을 고려한 정책과 사업을 바탕으로 한 ‘내실 있는 지역성장’이 지역발전위원회의 의무이자 설립 취지라며 지역발전론을 펴고자 했다.

지방재정 더 늘리고 자치 역량 강화해야

1기 지역발전위원회가 지역산업 역량 강화에 치중했다면 2기부터는 여전한 중앙집권체제 속에서 ‘2할·3할 자치’에 머무르고 있는 지방자치 수준을 업그레이드하는 데도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산업의 중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문화·복지·일자리 등 각 분야에서 광역경제권의 핵심인 도시 역량을 높이는 데 주력하겠다는 것이다. 광역경제권의 핵심인 광역시의 구도심이 쇠락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도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백발에 작지만 강단진 체구의 홍 위원장은 인터뷰 내내 건설교통부 차관 등 정부 고위관료는 물론 국토개발원장, 인천연구원장, 대구경북연구원장 등 중앙 및 지방연구기관의 수장을 지내면서 얻은 폭넓은 시각과 오랜 경험에서 우러난 자신만의 지역발전 철학을 설파했다. 때로는 솔직하게 한계를 인정하기도 했다.

그는 40여 분간 인터뷰를 마치고

자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일대를 둘러 보겠다고 서둘러 자리를 떴다. 다음은 일문일답.

- 건설교통부 차관을 끝으로 주로 지방 연구기관에서 근무했는데, 이번에 다시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소감은?

▲지난달 말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았다. 고향에서 공직을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불러줘 감사하다는 인사와 함께 ‘덤으로 얻은 공직’인 만큼 소신껏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중앙정부에서는 깨릴 수도 있겠으나 지역의 제대로 된 목소리를 전달하고 지방의 대변인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할 생각이다. 지역이 쇠락한 선진국은 없으며 수도권과 지방의 동반성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라는 소신을 믿기가 끝날 때까지 지켰다.

- 이명박 정부 들어 지역균형발전 추진이 다소 퇴색했다는 지적이 있다.

▲이전 정부의 정책은 수도권의 공공기관이나 행정기능을 지방으로 분산하는 것이 그 핵심이었다. 이 같은 정책은 프랑스 등 일부 선진국에서도 시도했으나 실패로 끝났다. 이는 지역의 특색에 맞춘 전략이 결여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할 수 있다. 경제성이 없고 전시적인 프로젝트보다는 지역 스스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잡고 중앙정부가 이를 뒷받침하는 지역발전 원칙을 지킬 필요가 있다. 앞으로 지역발전위원회는 이 부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중앙은 지방을 잘 모르고, 지방은 수도권을 따라하는 구태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한다.

- 지역발전위원회의 대표적인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의 올해 예산이 고작 500억원에 불과하다. 이를 7개 광역경제권이

나누어 사업을 추진하는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아직 자세히 검토해보지 못했다. 예산이 그 정도라면 본래 취지에서 어긋난 것으로 보인다. 광역경제권은 중앙정부가 지방을 수도권은 물론 세계 각 경제권과도 경쟁할 수 있도록 육성하기 위해 설정한 것이다. 따라서 그런 취지에 맞게 사업비를 더 늘려야 할 것이다. 구체적인 방안은 고민해보겠다.

- 지역발전위원회가 지역산업 또는 지역경제발전 측면만 치중하고 있다는 인상이 짙다. 위원회가 지방자치 역량을 강화시키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우리나라는 오랜 중앙집권의 역사를 갖고 있다. 이를 하루 아침에 바꿔버릴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이제는 이러한 획일적인 패러다임이 변화를 맞이할 때가 됐다. 무엇보다 지방자정을 늘려주는 정책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들은 공무원 인건비 주고, 국비에 맞춰 사회복지비 부담하고, 계속사업에 예산을 쓰면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이 없다. 강은태 광주시장도 쓸 돈이 별로 없을 것이다. 이번 정부에서 비록 적기는 하지만 지방소비를 만들어냈으며 이를 다음 정부에서 50%까지 늘려나가는 등 일관적인 지방재정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 광주는 아시아의 문화중심도시로 나아가고자 한다. 이에 대해 조언한다.

▲광주는 호남의 중심도시이자 광역경제권의 리더이다. 광주가 잘나가지 못하면 호남 역시 파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구심점인 광주가 살아야하며 교육·문화·의료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광주만의 것 추구해 세계화의 모범 되길

이제 도시는 산업이 아닌 문화의 발상지이며, 그런 점에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들어설 광주의 미래는 밝다. 문제는 전당이 세계에 내놓을 수 있는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생산해내는 것이다. 다른 도시가 하지 못하는 광산업의 터전을 마련한 것을 봐도 광주는 분명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수도권이나 다른 지방을 배까지 말고 광주만의 것을 추구했으면 한다. 또 도시의 확에 투자하기보다는 기존도심에 눈을 돌려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해주는 방향으로 지역발전 전략을 수립했으면 한다. 광주가 지역화(localization)와 세계화의 모범이 됐으면 좋겠다.

- 취임하지마자 광주·전남을 찾았다. 특별한 이유가 있나.

▲이 정부 들어 호남의 소외가 심해졌다는 일부 목소리가 있었다. 그러한 인식을 불식시키고 호남의 현안을 우선적으로 챙기겠다는 개인적인 다짐을 갖고 방문하게 됐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 R&D특구 조성, F1 개최 등의 예산이 적재적소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하겠다.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동남권 신공항, 대한토지주택공사 등을 두고 지역 간 갈등이 심화한 수준이다.

▲국책사업의 입지결정과 관련해 불필요한 논란과 국력낭비를 줄이기 위해 입지선정을 포함한 사업의 추진 일정 등을 명확히 공표할 필요가 있다. 또 선정과정에서도 절차적 투명성과 공정성을 최대한 확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사진=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광주 시내버스조합 전면 재감사 필요”

광주시의회 시정질문

19일 열린 광주시의회 제19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는 송경중(민주·광산 3)·나종현(민주·남구 3)·정희곤(교육위원·북구) 의원 등이 나서 광주시를 상대로 광주시내버스 준공영제 대책과 불법 건축물 단속 및 이행강제금 부과 미흡, 자동차 번호판 독과점 문제 등에 대해 질타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 관리감독 개선해야”=광주시의회 송경중(민주·광산 3) 의원은 이날 시정질의를 통해 “광주시가 지난 2월 시내버스 조합에 대한 감사결과 고작 940만 원을 환수하는데 그치는 등 버스운송조합에 국한된 제한적이고 형식적인 감사”라며 “향후 시내버스 운영 전 부문에 걸친 대대적인 감사를 다시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또 “수원지구의 중앙버스 차로로 인해 주민들이 심각한 불편을 겪고 있다”라며 중앙차로제 폐지를 주문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시내버스 운송업체에 대한 정산감사시에 공인회계사를 참여시켜 보다 면밀하고 투명한 정산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수원지구 중앙버스 전용차로 폐지에 대해서는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어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불법 건축물 단속 곁돌이=광주시의회 나종현(민주·남구 3) 의원은 광주지역 건축물에 대한 항공사진 판독결과 불법건축물이 7000여 건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단속 건수는 지난 2009년 743건, 지난해 878건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또 불법

건축물 단속에 따른 시정건수도 지난 2009년 456건(61.4%), 지난해 367건(41.8%)에 그쳤으며 올해도 총 733건을 적발했으나 시정건수는 고작 34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건축물 단속 이후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의 미징수율은 지난 2009년 38%(7억3900만원), 지난해 42%(9억4700만원)에 달해 시정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나 의원은 “최근 불법건축물 단속과 관련해 광주 모 구청 직원이 구속되고 건축주들의 불·탈법이 일상화되면서 광주시 건축행정 전반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답변을 통해 “공무원과 건축사, 시민단체 등으로 합동점검반을 편성, 지난 2009년 항공사진 판독 결과를 토대로 새로 건축이 된 1만7929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며 “이행강제금이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에 적극 건의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자동차 번호판 제작 독과점=광주시의회 정희곤 교육위원은 이날 시정질문을 통해 “광주지역 자동차 등록대수가 최근 30년 사이 50배가량 증가했으나 자동차번호판 제작 납품은 단 2개 업체가 독과점으로 계약해 각종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광주지역 자동차 번호판 발급 대행사는 2개 회사로, A사는 지난 1975년 2월부터 37년 동안, B사는 지난 1976년 12월부터 36년 동안 납품업무를 독과점하고 있다”라며 “자동차번호판 제작은 고도의 전문기술이나 별도 조치가 필요한 것이 아닌데도 광주시가 공모절차를 밟지 않아 시장진입을 막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장기간의 독과점 운영이 새로운 업체의 진입을 막는다는 민원이 야기됨에 따라 상반기 중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조례개정을 통해 경쟁체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원기기자 cki@kwangju.co.kr

김영진 의원, 과학벨트 호남유치위 건의문 전달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이하 과학벨트) 호남권 유치위원회 공동위원장이 된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1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창경 교육과학기술부 2차관을 만나 과학벨트 입지선정계획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입지평가를 요구하는 ‘과학벨트 호남권 유치위원회 건의서’를 전달했다.

김 의원은 건의서를 전달하며 “5

대 입지조건에 대한 평가지표를 만들면서 특정요건의 비중을 축소하거나 가중치를 두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고, 열거주의를 택한 특별법 취지에 반하는 일”이라며 “공정성을 상실한 평가지표로는 결과에 대한 동의를 이끌어내기 어려울뿐더러, 정당성 논란 속에 더 큰 국민적 혼란과 국론분열을 자초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www.krb.co.kr



창간 59주년
광주일보
1952-2011



거꾸로 보다 더 많이 연료비가 절약되는 보일러

차는 2번 우린 차가
제 맞이지요!

보일러는 4번 라야
가스비가 절약됩니다!

Kiturami 4번타는 보일러

• 뛰어난 신기술의 보일러

저탄소 보일러의 장점과 순간식 보일러의 장점만을 채택한 뛰어난 신기술로 만든 저탄소 비례 제어 고효율보일러입니다.

• 온수 출탕 시간의 단축 및 맞춤형 온도 사용

보온병과 같이 보온되는 축열조에는 항상 뜨거운 온수가 충분히 저장되어 있어 출탕 시간이 빠르며 출탕 온도가 안정적이어서 원하시는 목적을 온도에 맞춰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환경을 생각하는 친환경 보일러

저 NOx버너의 친환경 연소시스템을 적용해 연소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NOx)과 일산화탄소(CO)를 낮춘, 환경을 생각하는 보일러입니다.



에너지효율 1등급

제품구입문의 : **1588-9000**

Kiturami